

# KMI 동향분석

**VOL.119**  
2019 MAY

발간년월 2019년 5월(통권 제11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센터장  
(yk405@kmi.re.kr/051-797-4791)  
현대송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위원  
(hyun@kmi.re.kr/051-797-4785)  
최지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유시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politique@kmi.re.kr/051-797-4801)  
김주형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김 민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김소연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ykim@kmi.re.kr/051-797-4642)

2019년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가 “글로벌 오션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여”라는 주제로 5월 9일~1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륙붕 등 한국의 해양영토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국제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는 회의로,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올해 제7회를 맞이하였다.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는 동해표기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국제수로기구(IHO)를 제외한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장 등이 모두 참여한 회의라는 것에 우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글로벌 해양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흔치 않은 기회를 한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의에 참가한 해양관련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와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BBNJ) 문제 등 글로벌 해양이슈들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으로선 국내 해양전문가들이 국제기구의 수장이나 고위직 직원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

KMI는 기조강연에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해양관련 국제기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와 같은 지구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KMI가 앞으로 해양관련 각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개도국의 해양법 역량강화사업인 여수국제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국제기구들과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만들 것임을 강조하였다.

라운드테이블은 박희권 석좌교수(한국외대)의 사회와 박용안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 마이클 롯지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 도로타 로스트-시민스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장, 그리고 가브리엘 퀘츠-완리 유엔 해양법국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박용안 의장은 국가들의 대륙붕 확장 신청이 많아 당초 예상(15년)과는 달리 앞으로 80년은 CLCS가 더 활동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LCS 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이클 롯지 ISA 사무총장은 심해저에서의 상업적 광물 채굴이 가시화되면서 해양환경 보호와 개발 이익 공유문제가 주된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도로타 로스트-시민스카 IMO 법률국장은 IMO가 해운해사 분야에서 안정적인 거버넌스 확립에 크게 기여했음을 지적하면서, 주요 도전과제로 유류오염사고 예방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해운해사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가브리엘 퀘츠완리 유엔 해양법국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KMI가 수행하고 있는 여수 국제아카데미와 같이 개도국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세션은 김인현 교수(고려대)의 사회와 김두영 전 ITLOS 사무차장, 넬 마즈웁 교수(독일 키일대) 및 이석우 교수(인하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ITLOS 설립 이후 지금까지 쟁송사건 24건 및 권고적 의견 2건 등 총 26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ITLOS는 판결을 통해 해양관련 분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결정들을 다수 내렸는데, 특히 선박의 신속석방 사건 판결을 통해 시간의 적절성과 보증금의 적정성 관련 기준을 제시했으며, 뱃갈만 해양경계사건에서 국제재판소들 중에서 처음으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과 CLCS의 관계에 대해 판결하였다. 다만, 다른 재판소들과 비교해서 ITLOS에 회부되는 사건 수가 적은 점은 ITLOS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유엔 CLCS 세션은 박용안 의장의 사회와 알디노 캄포스 위원 등 4명의 CLCS 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대륙붕 개념을 가지고서 국가들이 제출한 현실적인 대륙붕 정보를 심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확장하는 대륙붕에 심해저가 포함되는지 문제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른 의미의 대륙변계를 CLCS가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제해저기구(ISA) 세션은 마이클 롯지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지현 ISA 환경관리광물자원국장, 크리스 브라운 ISA 법률고문, 와릭 굴렛 교수 및 주세종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발전했지만, 오늘날 상업적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채광에 따른 해양환경보호 문제, 해저전선 부설과의 충돌 문제, 개발이익을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기업체와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인류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

IMO 세션은 김인현 교수의 사회와 드로타 로스트-시민스카 IMO 법률국장, 알도 처콕 교수(캐나다 달하우지대), 블랑코 바잔 국제변호사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IMO의 주요 현안문제는 선박등록 위조의 방지 문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확보와 법적 규제 문제,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해운선사의 수익성 고려 사이의 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션은 이상고 교수의 사회와 마뉴엘 바렌지 FAO 어업양식정책자원부장,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최지현 KMI 부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오늘날 인류의 식량안보가 위협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영양 상태는 퇴보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31% 이상이 남획되고 약 60%는 이미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량에 도달해 있는 등 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엔 해양법국(DOALOS) 세션은 가브리엘 퀘츠완리 유엔 해양법국장의 사회와 2명의 해양법국 선임법률관, 세계해사대학의 로난 룡 교수와 켄선 연구원, 그리고 스튜어트 케이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유엔 DOALOS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중심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회원국의 영해기선 설정, EEZ와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 등에 대한 수탁처 기능 수행은 물론 오늘날 글로벌 이슈인 BBNJ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의 의제 설정과 협약 채택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 관련 다양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제7회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5월 9일~10일 서울에서 개최

### ■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영토 현안 논의와 세계적인 해양영토 전문가와의 인적·학술적인 교류를 위해 시작

-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 연안국들의 해양 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도서 영유권과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12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 확장을 위한 정식 정보를 제출하면서 해양영토에 대한 경쟁이 가시화됨
- 필리핀 대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 사건 등 주요 국제 재판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법 전문가들의 해석과 주장들이 국제적인 여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이에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후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국제학술회의를 시작함

표 1.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개최 현황

연도	개최 날짜	장소	주제
2013	6월 26~27일	서울	대륙붕에 관한 법적·과학적 쟁점
2014	5월 15~16일	서울	동중국해의 신뢰 구축과 협력 방안
2015	5월 1~2일	제주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2016	6월 10~11일	부산	아시아에서의 해양 과제
2017	6월 20~21일	서울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아시아의 해양 질서
2018	5월 17~18일	제주	중첩수역에서의 해양협력 증진
2019	5월 9~10일	서울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

### ■ 제7회 2019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는 “글로벌 오션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라는 주제로 개최

- 올해 회의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 해양관련 국제기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검토함
- 유엔 해양법국장, 유엔 CLCS 의장 및 위원들, ISA 사무총장, IMO 법률국장 및 FAO 관계자와 해양법 석학 등과 국내 전문가들 30여명이 이번 회의에 발표, 좌장, 토론 등으로 참여하였음

표 2.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프로그램 (사회 및 발표자)

순서	성명	소속 및 직위
개회식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걸	국회의원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기조강연	양창호	KMI 원장
라운드테이블	박희권 (사회)	한국외대 석좌교수
	박용안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
	마이클 롯지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
	D. 로스트-시민스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 국장
	가브리엘 퀘츠완리	유엔 해양법국(DOALOS) 국장
제1세션	이서향 (사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넬 마쯔-뤽	독일 키일대 교수
	이석우	인하대 교수
제2세션	박용안 (사회)	유엔 CLCS 의장
	알디노 캠포스	유엔 CLCS 위원
	카를로스 M. 패터리니	유엔 CLCS 위원
	로렌스 F. 아오사카	유엔 CLCS 위원
	마줄란 빈 마돈	유엔 CLCS 위원
제3세션	마이클 롯지 (사회)	ISA 사무총장
	이지현	ISA 환경관리광물자원국 국장
	크리스 브라운	ISA 법률고문
	와릭 굴렛	호주 울릉공대 교수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제4세션	김인현 (사회)	고려대 교수
	D. 로스트-시민스카	IMO 법률국장
	알도 처콕	캐나다 달하우지대 교수
	A. 블랑코-바잔	국제변호사, 전 IMO 법률국 국장
제5세션	이상고 (사회)	세계수산대학 학장, FAO 수산위원회 부의장
	마뉴엘 바렌지	FAO 어업양식정책지원부 부장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최지현	KMI 부연구원
제6세션	가브리엘 퀘츠완리 (사회)	유엔 DOALOS 국장
	앨리스 하쿠부룬디	유엔 DOALOS 선임법률관
	뤼기 산토수오소	유엔 DOALOS 선임법률관
	로난 룡	세계해사대학 교수
	젠 선	세계해사대학 연구원
	스튜어트 케이	호주 울릉공대 교수
종합정리	김성진 (사회)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대 겸임교수

## 기조강연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국제법적 의미와 해양을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 국제기구의 역할

### 국내외 참가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인식

####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독립운동의 전환점 역할

- 3.1. 독립운동은 침략주의,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결권과 인류의 평등, 세계평화를 주창한 민중의 자발적인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운동 등 해외에도 영향을 미침
- 100년 전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자결권, 인류의 평등과 세계평화와 같은 오늘날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주창한 것은 놀라운 일임
- 상해 임시정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수립이라는 의미를 가짐
-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들고, 입법·행정·사법부의 조직을 갖추고, 후에는 무관학교를 세우고 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해방이 되기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
-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망명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당시 망명정부였던 프랑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로부터 정부승인을 받기도 하였지만, 망명정부가 아닌 정식정부로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음
- 임시정부는 당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음

### 해양을 통한 평화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간 협력 필요성 증가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상호 협력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플라스틱 문제 등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짐
- BBNJ와 같이 글로벌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이용은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들의 해양영토 확보 경쟁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기구들의 자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국제기구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존의 해양거버넌스를 개선, 발전시키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구의 설립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KMI, 지구적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 KMI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 해양법 역량강화도 적극 추진

- ITLOS, CLCS, ISA, IMO, FAO 및 유엔 DOALOS와 KMI의 해양정책, 해운해사, 항만물류 및 수산 등 각 연구본부가 해오고 있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확대 발전시켜 갈 계획임
- 특히 해양법 관련해서 ITLOS와 정기적으로 인턴십프로그램 지원, 지역워크숍 공동개최를 해오고 있으며, 유엔 DOALOS와 공동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개도국 해양법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여수국제아카데미를 유엔 DOALOS 및 IS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개최함으로써 아카데미를 명실상부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격상시킬 계획임

## 라운드테이블 : 국제기구들의 해양거버넌스 기여와 도전 과제

### ■ 해양관련 국제기구 대표,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도전 과제에 대해 발표

- 유엔 CLCS의 박용안 의장, ISA의 마이클 룯지 사무총장, IMO의 도로타 로스트-시민스카 법률국장, 유엔 DOALOS의 가브리엘 퀘츠-완리 국장이 발표함

## 유엔 CLCS, 열악한 환경개선과 심사제도 개선 필요 주장

### ■ CLCS 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 과다는 유엔 차원의 대책이 필요

- 위원들은 1년 중 21주를 심사를 위해 뉴욕에 체류하기 때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많은 경비가 필요함

- 동유럽 출신 위원들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유엔 기금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위원들의 사무 환경의 경우,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법·기술·행정 담당 인력의 지원이 부족함

## ■ CLCS, 앞으로 80년 간 활동 지속 예상, 제도 개선 필요

- 2002년 러시아의 대륙붕한계 확장을 위한 정보 제출을 기점으로, 2019년 4월 기준 7건의 수정 제출을 포함해서 총 90건의 정보가 CLCS에 제출되었음
- 이 중 2019년 3월 회기를 기준으로 총 32건에 대해 권고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예비정보로 제출된 46건이 정식정보로 제출될 것으로 전망함
- 당초는 CLCS가 15년 정도 활동할 것으로 보았으나, 정보제출의 증가와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현재는 적어도 80년은 더 활동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연안국이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 정보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임
- CLCS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현행 연간 21주의 업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엔 DOALOS,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이용 계획 필요

### ■ 유엔 DOALOS, 해양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 기능 수행

- 유엔 DOALOS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공해어업협정 및 여러 결의를 통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에는 BBNJ 관련 임무도 수행함
- 특히 공해어업협정 및 유엔 CLCS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유엔 총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이고 부분적인 해양 거버넌스 제고를 위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총회에서 연례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제14번 목표인 해양환경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제간 펠로우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특히 KMI, ISA 등과도 협력하고 있음



## ■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 최근 수행된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오늘날 해양은 수용의 한계를 보임
-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간으로 다양한 규제가 있지만 국가들의 이행률은 떨어지고 전반적 상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많은 국가가 동참해야 함
- 유엔 DOALOS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함에 있어 총체적이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예방적인 접근법을 견지해야 함
  - ※ 2030 아젠다: 2015년 유엔총회가 2015년 9월 25일 채택한 결의로, 정식명칭은 “우리 세상을 변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임.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핵심가치로 삼음
- 유엔 DOALOS에서는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통합적인 연구를 해야 함
-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중요한데, 여수국제아카데미나 유엔 해양법국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ISA, 심해저의 상업적 개발 환경 조성 and 개발이익 공유 과제

### ■ 25년 동안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크게 기여

- 첫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레짐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음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당시 협약에 어긋난 일방적인 주장이나 행위가 팽배했고, 비준국수도 협약이 국제해양법의 근간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했음
  - 협약 발효 후 모든 것이 협약 하 이행이 되고 있고, 보편적인 지위를 향유할 정도의 비준국 수를 보유하게 되어 안정성에 기여하게 됨
- 둘째,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확립에 공헌하였음
  -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정부 간 기구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 관리한다는 것으로 제3차 해양법회의의 당시 혁명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국제해저기구가 기여함
- 셋째, 심해저 탐사를 통해 해양 탐험과 탐사의 시대, 해양과학의 시대 도래에 공헌함
  - ISA를 통해 레짐의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탐사를 위한 계약, 국가들의 탐사가 진행하도록 장려함
  - 한국은 각기 망간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과 관련한 탐사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심해저 연구를 선도하고 인류공동유산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음

## ■ 상업적 광물자원 개발과 인류를 위한 개발이익 분배 등 3가지 도전 과제

- 첫째, 상업적 심해저 채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현재 탐사단계에서 채광단계로 넘어가려는 중으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개발 중인 ISA의 규범체계를 통해 규제와 재정 등이 결정될 예정임
- 둘째, 채광과 환경관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임
  - 환경적 계획은 지역 수준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광구들 중에 이행되는 곳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한국은 이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망간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과 협업 그리고 과학지식을 통해 환경계획도 수립한 바 있음
- 셋째, 채광을 통해 인류를 위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임
  - 이는 ISA의 모든 임무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과학지식 외에 재정적인 수입도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임
  - 향후 심해저 채광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40조의 인류의 이익 부분뿐만 아니라 제82조 상의 외측 대륙붕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부분도 실천해야 함

## IMO, 해난사고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

### ■ IMO, 해운해사 분야의 안정적 해양거버넌스 확립에 기여

- 1958년 설립된 IMO는 174개 회원국, 140개 이상의 IGO와 NGO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5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안정적 해운업, 친환경적 선박운행, 해상안전 등에 기여함
- IMO의 2018-2023 계획은 IMO가 전세계 해운 관련 주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며,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계획으로 잡고 있음
- IMO는 검토(review), 개발(development), 이행(implementation), 준수(compliance)의 4가지 측면을 통해 해양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은 IMO를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해상안전을 위한 권한을 가지는 국제기구’라고 언급하며, 항행의 자유,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IMO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데, 직접적인 교육 훈련 외에 세계해사대학교(WMU, 스웨덴)와 국제해사법연구소(IMLI, 몰타)를 통해 기여하고 있음

## ■ IMO가 직면한 도전과제

- 해운 관련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오염 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과제임
- IMO는 기존의 사후 대응방식을 벗어나 선제적 예견과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IMO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이는 해운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점점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해양환경보호와 규제 등과 관련해서 해운업을 논의할 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운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제1세션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TLOS, 설립 이후 총 26건의 사건 수행

#### ■ ITLOS 설립 이후 총 26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쟁송사건 24건과 권고적 의견 2건으로 구성

- ITLOS는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며, 지역적 안배를 통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4건의 쟁송사건 중 2건이 ITLOS 규칙 제15조 2항 하의 특별재판부에 회부되었고, 21건의 쟁송사건과 1건의 권고적 의견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됨
- 현재 사건 1개(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계류 중임

#### ■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주로 적용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를 따르고, 국제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기도 함

- 9개의 신속석방 사건, 7개의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법규 및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음
- 2개의 권고적 의견 사건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이외에 국제조약, ICJ 판례가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음
- 특히 심해저 분쟁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1994년 이행협약, 망간 규정과 황화물 규정이 언급된 리오선언 원칙을 적용하였음

- 7개의 본안 사건 중 2개가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며,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되지만,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제74조와 제83조 이전에 형성된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의의무’는 특히 해양환경보호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 수행

### ■ 적절한 ‘주의의무’ 위반은 확정적 개념은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개념임

- 유엔해양법협약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새로운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성과 발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추후 법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수용 및 진화가 가능함

### ■ 국제법상의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가 존재하며, 적절한 주의의무는 행위 의무에 해당하며 국가책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적절한 주의의무 개념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법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임
- 행위 의무의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국가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사용하게 됨
- 주의의무는 명료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ITLOS는 책임이 수반된 주의와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적 기준을 성립시키는 규범을 분명히 할 수 있음

### ■ ITLOS에서 적절한 주의의무는 행위 의무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해양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함

- 협약 제139조, 제192조, 제194조 제5항이 적절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해당함
- 적절한 주의의무는 요건은 심해저 광구와 불법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재판의 적절한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의 적용을 통해 해양의 지속적인 보전이 가능함

## ITLOS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과제

### ■ ITLOS는 23년 동안 해양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음

- 신속한 사건 해결과 잘 구성된 재판운영으로 ITLOS는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신속석방 사건을 통하여 ITLOS는 시간의 적절성 및 보증금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한 기준을 제공함
-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해양환경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제공함 (사전예방적 접근, 적절한 주의의무 등과 관련한 요건 내용을 밝혀줌)
-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벵갈만 사건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및 CLCS와 재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정표가 될 판결을 함

### ■ ITLOS에 사건이 많이 회부되지 않은 이유 추론

- 유엔해양법협약 상 중재재판 사건에 ITLOS 재판관들이 중재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재재판이 ITLOS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
- ITLOS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해양법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재판관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함
- ITLOS 규정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및 ITLOS에 관할권을 부여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근래 ITLOS는 자신의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관할권의 확대 경향은 국가들이 ITLOS를 회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 Q & A

- Q. ITLOS의 분쟁해결 기능이 신속석방과 잠정조치와 같은 긴급사건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이 분쟁해결절차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
- A. 긴급사건 즉 잠정조치와 신속석방의 경우 해양환경 분야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긴급사건 절차는 일정 부분 분쟁의 악화를 방지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Q. ITLOS 사무국이 중재재판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음
- A. 이 아이디어는 유럽국가에 의해 제기되었고 재판소 내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재판소의 예산 부담 문제가 있음. 즉,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제7부속서 중재재판의 사무국으로 ITLOS를 승인하여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지원하게 되면 당사국 총회에서 해당 지원의무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반대했음

- Q.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관련 사안에 대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경우 ITLOS에게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A. ITLOS 규칙 제21조의 “모든 문제(all matters)”와 관련된 것으로 ITLOS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문제에는 쟁송사건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봄

## 제2세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유엔 CLCS)

### CLCS, 대륙붕 개념의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어려움

#### ■ CLCS는 연안국의 제출 정보 중 분쟁이 있는 경우를 다루기 위한 5가지 실행방침을 수립

- 1) 관련 당사국의 동의와 함께 제출 정보를 검토 후 소위원회가 최종권고를 내림
- 2) 제출 정보가 하나 이상의 외측 대륙붕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일부분만 분쟁과 연루되어 있을 경우 CLCS는 분쟁 관련 당사국 동의 없이도 분쟁과 관련 없는 외측 대륙붕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3) 제출 정보에서 청구된 모든 대륙붕 외측 부분이 미해결 해양경계획정과 관련 있을 경우, 해당 분쟁 당사국 중 한 국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 4) 제출 정보가 분쟁여지가 있는 육지영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경우 제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사하지 않음
- 5) 제출 정보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처럼 또 다른 유형의 미해결분쟁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CLCS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 (예: 일본의 오키노 토리시마 관련 제출 정보)

#### ■ 대륙사면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대륙붕의 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륙사면의 끝을 설정하는 것이 연안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있어서 동일한 ‘대륙붕’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적, 과학적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며 자연지리학적 대륙붕의 법적 개념 전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함



##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3항의 해당조항이 심해저를 포함하지 않음

- CLCS에 제출되는 연안국자료에는 과학적/지질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질학적/형태학적 자료가 국가의 제출 자료에 적용되는지 논의가 필요함
- 지질학적·형태학적 ‘대륙변계’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대륙사면의 끝을 결정할 때 연안국이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지질물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때와 형태학적 접근 간 상이성을 검토해야 함

##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6항은 해저산맥(ridge)을 기술하고 있는데, CLCS가 이와 다른 대륙변계를 정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CLCS에서는 일부 해저산맥들, 심해저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있음
- 이상적인 대륙변계는 보조적인 용기로서 해저산맥이 있어야 하므로 비이상적인 상황인 해저산맥이 변계의 전체가 되는 현실도 있음
- 대륙변계의 변화자료를 보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각의 유형또한 변계 구분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심해저 용기부분에서 용기의 고저에 따른 해양변계의 결정 또한 문제가 되는 현실임

## ■ Q & A

- Awosika 위원은 CLCS가 대륙붕 외측 대륙붕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했는데 일본의 사례도 들어서 설명할 때 한국 제출부분에 대해 CLCS가 심사하기 위해 우리가 할 부분이 있는지 및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해야함
- 세 분의 발표자는 대륙붕의 지질학적 법적 개념의 차이, 그리고 대륙변계를 통해 대륙붕의 경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뤘는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개념의 대륙붕, 대륙한계, 고정점, 퇴적물, 대륙사면의 끝 등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륙사면과 대륙변계의 차이 때문에 법적 개념과 지질학적 개념 간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대륙붕의 과학적 개념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녹아들면서 국제법적으로도 조망이 되고 있으며, 국가들은 이런 CLCS의 권고적 의견과 같은 권위 있는 장치가 있어야 협약 이행을 장려할 수 있는 상황임

## 제3세션 : 국제해저기구(ISA)

# ISA, 채광에 따른 해양환경보호, 해저전선 부설과의 충돌 등 해결 과제 산적

###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제 법제도 상당히 발전

- 심해저 탐사활동은 3가지 탐사규정에 따라 보통 15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부는 5년 연장되어 2020년 혹은 2022년에 만기에 이르는 계약도 있음
- 현재 총 29건의 탐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16건은 망간단괴 탐사계획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준비문서로 2019년 3월 말에 ISA 법률기술위원회에서 작업한 규정안(ISBA/C/25/WP.1)이 있는데, 오는 7월 ISA 이사회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예정
- 이 규정은 향후 ISA와 미래 채광 사업자간 권리의무를 규정하게 되며, 1994년 이행협정 내용을 담은 지침도 함께 첨부할 예정임. ISA는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자원과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을 규제할 예정임
- 앞으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결과중심 접근법(outcome-based approach)을 지향하는데, 이것이 채광업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2020년 7월 채택을 목표로 규정 문안 연구를 수행 중인데, 국가와 국제기구 간 접점(interface)을 창출할 수 있을지 특히 ISA와 IMO 간 관계를 집중 연구 중임
- 심해 자원개발 시 적용될 환경분야 기준, 역치나 지표에 대한 환경기준, 채광감시와 이행 메커니즘 활성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이익의 공정한 배분원칙, 사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함

### ■ 광구 관련 지역 환경관리계획 진행

- ISA의 임무는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호, 해양오염으로부터 위험 방지, 심해저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및 해양환경의 동식물군에 대한 피해 방지 등임
- 광업규칙(mining code)을 내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정의하고, 심해환경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음



- 2012년 클라리온-클리퍼튼(Clarion-Clipperton) 광구 환경관리계획이 ISA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특별환경관심지역(Areas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 APEIs)을 지정하여 채광을 금지함
- 조만간 KIOST가 지역환경관리절차(Regional Environment Management Process: REMP) 컨퍼런스를 이어받아 동북아 해양환경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REMP는 강력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해 중요한데, 일관되고 조율된 접근, 투명한 방식으로 모두가 대면되는 것이 필수적임

## ■ 심해저 채광 활동과 해저전선 부설관리 사이 충돌 방지 필요

- 심해저 해저전선의 보호 및 관리가 채광 활동과 충돌할 수 있음
- 심해저 활동과 해저전선 보호 및 관리가 유엔해양법협약 상 적법한 활동이지만 채광 활동이 전선이 부설된 곳에서 이뤄지면 충돌 발생 가능함
- 국제전선보호위원회와 ISA는 MOU 체결
- 유엔해양법협약 제147조 1항은 심해저활동은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reasonable regard)해서 수행해야한다는 문언이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2항은 모든 국가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국가의 이익과 심해저활동 관련 동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함
- ISA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고려를 통해 전선업자와 채광업자 간 분쟁을 줄이려고 노력했음
- 유엔해양법협약 상 양측의 권리 중 어느 쪽이 우선시되지는 않으며, 분쟁을 위한 합의가 필요함
  - 채광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때 전선이 이미 있거나 나중에 부설될 때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상이 되는 장소와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합리적인 또는 적절한 고려에 수반되는 의무는 다른데, 보통은 통지(notice), 협의(consultation)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협의의 경우, 양측이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양보를 하여 중간지점을 찾아야 함

## ■ 한국, 심해저 광구 개발을 선도하며 해양환경보호에 있어서도 모범적

- 한국은 5개의 탐사 라이선스, 즉 ISA 3개, 남태평양 EEZ에 2개가 있음
- 한국에서는 심해저 채굴 관련 200여 편 이상의 논문 발표되었음
- 심해저 채굴은 최근 부각된 분야로 지난 5년간 15개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등 최근에 급증하고 있음

- 채굴로 인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나 소음이 생물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며, 부유물 형성(plume)과 부유물 형성의 재생성 등 해양환경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아직 심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해서 일치된 규제안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구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방법론 표준화, 지침 업데이트, REMP 설립, 보호 구역 설정 확대 등을 해야 함
- ISA는 국제케이블보호기구(ICPC),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기구들과도 협력해야 함

## 제4세션 : 국제해사기구(IMO)

### 선박등록 위조, 자율운항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 과제

#### ■ 최근 선박등록 위조와 자율운항 선박 문제가 부상

- IMO 법률위원회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제는 선박등록 위조와 자율운항선박 문제임
- 선박등록 위조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작년에 IMO가 법률위원회의 의제로 삼아 올해부터 검토하게 된 주제임
- 선박등록 위조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기국의 통제와 관할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위해서임
- 유엔해양법협약 제91조와 제94조는 선박등록을 규정하고 있음
  - \* 1986년의 ‘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현재 14개국이 비준하였고 2012년 모로코의 비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준국이 나오지 않아 발효되고 있지 않음
- IMO는 IMO 회원국감사제도, IMO 선박식별번호제도, IMO 고유 회사 및 등록 선주 식별 번호 제도(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해사안전위원회 순환권고 절차, “유령”선박 등록방지를 위한 총회 결의 등으로 기국의 관할권과 통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음
- 일부는 강제적이고 일부는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해당 제도들은 선박등록에 대한 법적 지침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선박의 안전항행 및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선박등록위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님

- IMO는 “등록소의 등록(register of registries)”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선박등록위조 및 선박 위조등록소 방지 조치에 관한 총회결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오는 11월에 소집되는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채택하여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임
- IMO는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이하 ‘MASS’)과 관련해 규제범위 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목적은 MASS 운영을 다루기 위해 기존의 IMO의 규제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 IMO는 50개 이상의 조약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들이 기존 규제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해사안전위원회, 해사법률위원회, 촉진위원회, 해사환경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 ■ IMO, 선박 온실가스배출 규제: 해운업계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 IMO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박의 탈탄소화임. 이것은 국제해운이 기여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부분으로 온실가스배출(GHG)을 경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하고 1.5도로 조절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07년 IMO 제2차 GHG 연구에서는 전세계 해운업의 3.3%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국제해운업은 2.7%를 배출하고 있음. 2.7%는 독일과 영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국제해운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임
- 2014년 IMO 제3차 GHG 연구에서는 현상유지를 할 경우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50-250% 증가할 것으로 보고함
- 국제기후에 관한 파리협정의 경우 IMO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됨. IMO의 당사국들은 무역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이 너무 복잡하여 고려하지 않기로 했음
- IMO는 지금까지 대기 오염에 대한 1991년 결의, 1997년 MARPO 부속서, 1997년 교토의 정서,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SBSTA와의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인 MARPOL 제6부속서 제4장(EEDI & SEEMP) 등을 채택하였음
- 신규선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선상에서의 자율적인 에너지 효율관리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연료 사용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함

- IMO의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전략은 기본적인 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함
-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과 의료공급 전략과 같은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 선박의 탄소 집약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대 이후부터는 탈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중기적으로 보면 2023년-2030년까지 저탄소연료를 증진시키고 저탄소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무탄소연료도 제고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적 조치(2030년 ~ 2050년)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박의 오염에 대한 규칙과 기타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규정도 있을 것임
- IMO의 역량의 한계와 관련해 IMO가 항만보다 선박과 더욱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만국은 자발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함
-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해서는 지역 체제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EU의 역할이 있으며, WTO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 해상 범죄에 맞서는 거버넌스 도구: 2005년 SUA 협약 의정서 제8조bis의 승선 규정

- IMO는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협약)의 의정서를 2005년에 채택함
- 기존 SUA 협약 제8조 1항이 2005년 SUA 협약의 의정서에서 제8조bis로 대체되었는데, 개정 조항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음
  -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 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선박에 접근을 하여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위 임검을 할 수 있으며, 자국 국기 게양으로 국가를 확인하고 자국 등록선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검을 요청한 국가가 이러한 정보를 받은 다음 기국이 선박에 대한 승선과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임검을 요청받은 국가는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음
  - 자국기 게양 하에서 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승선을 허용할 경우 기국의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46개 국가만 2005년 SUA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한국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음

## 제5세션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 ■ 현재 식량안보와 영양상태는 전반적으로 퇴보

- 지난 2년 간 영양부족 인구는 8억2천백만 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5세 이하 어린이 5천만 명은 영양실조에 있고, 가임여성 인구의 3분의 1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성인 8명중 1명은 비만 상태임

#### ■ 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어업 위협

- 어족자원의 33% 이상은 남획되고 있으며, 59.9%는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량에 이미 도달해 있으며, 기후변화는 새로운 해양환경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어업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SDG) 제14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FAO 기술보고서가 다루고 있음
-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유지되면 60여개의 국가의 EEZ에 새로운 어족자원이 유입 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규제는 없음

#### ■ 북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NPFC),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족자원의 현황 정리 및 관리계획 수립

- 2015년 NPFC가 발족되었으며, NPFC 협약이 발효하면서 자발적 조치는 구속력 있는 조치로 전환되어 북태평양의 지역관리체계가 형성됨
- 처음에는 저인망 어업이 대상이었는데 원양어업과 다른 상업성이 있는 어종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음
- NPFC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대만, 미국, 바나투의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곧 EU도 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NPFC는 주로 북위 10도를 다루며, 거의 모든 어종을 포괄하지만 이미 다른 RFMO에서 다루는 어종은 제외함

- 9개의 보존 및 관리 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MM)을 채택하여 자문을 받았고,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원칙을 관리상 반영하고 있음
- 사전예방의 원칙의 경우 조업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하지 않음에도 선박을 수를 조율하는 규제방안을 구사하고 있음
- 선박 직접 입력보고제도, 모니터링 시스템연구를 통해 VMS를 도입했으며, 해상 임검 및 검색제도가 2019년 4월 1일 출범하였음
- 현재 NPFC의 중요한 관심사항은 IUU 어업행위의 근절인데, 이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제6세션 : 유엔 해양법국(유엔 DOALOS)

# 유엔 DOALOS,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중심에서 BBNJ 등 새로운 의제 주도

### ■ 유엔 DOALOS,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중심

- 유엔 사무국 내 법률국 아래에서 해양관련 정책 자문,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해 도모 등 협약 관련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ITLOS, CLCS, ISA가 연례 보고를 하며, 재판소와 CLCS의 구성원을 선출하기도 함
- 수탁처 기능 수행: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여러 자료를 수탁하고 있는데, 이때 영해기선, 군도기선, EEZ 외측한계, 대륙붕 외측한계, 분쟁절차의 선택, 관할권 예외에 관한 자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319조에 의거하여 유엔 DOALOS에 기탁하고 있음
-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이행 촉진역할을 맡고 있으며, 비공식협의체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

### ■ 최근 글로벌 이슈인 BBNJ 의제 주도

- 유엔 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지속유지 가능성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입하는데 DOALOS는 이를 여러 프로세스로 공론화하고 있음



- 현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협정) 채택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국가, 국제기구, 어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음

## ■ 유엔 DOALOS, 국제해양 역량강화사업 주도

- 유엔 DOALOS는 국제해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또는 유네스코 산하 IOC 등과 협력해서 운영 중임
-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별 협력 프로그램이 있고, 신탁기금도 운영 중임
-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 여러 국가(호주, 그리스, 남아공 등 총 23국)가 자국의 기관을 개방해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인턴십 프로그램은 ITLOS, IMO, FAO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특히 ITLOS 인턴십은 함부르크 재판소에서 이뤄지며 소속기관에 배치된 인턴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KMI는 해당 신탁기금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 Q & A

- Q. 유엔 DOALOS의 임무 중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참여 촉진이 있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비체약국에게 가입을 장려하는 계획이 있는지? 보편적 참여의 유도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여부
- A. 유엔 DOALOS는 최빈국, 내륙국, 소도서 개도국을 위해 Out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처럼 비체약국이어도 유엔해양법협약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미국은 공해어업협정의 체약국이기도 함
- Q. 유엔 DOALOS는 유엔 사무국 산하 법률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양법국이 법률실에서 분리되어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
- A. 법률실 산하라서 오히려 다행인 점이 있으며, 유엔 총회에서 BBNJ 등 여러 프로세스를 구축 하였기에 유엔 DOALOS의 업무범위가 넓어졌으며 많은 업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임
- Q. 한국정부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역량강화 면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
- A. 한국의 세계수산대학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 시사점

# 국제기구들, 글로벌 해양이슈 대응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 해양관련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와 BBNJ 등 글로벌 해양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의 참석가자들은 이틀 동안의 학술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BBNJ 등 글로벌 해양이슈들이 여러 국제기구들이 관련된 의제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음

### ■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서로의 해양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각 국제기구들이 처한 해양이슈들을 논의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 국내 해양전문가들이 국제기구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음

- 국내 해양전문가들이 ITLOS 등 해양관련 6개 국제기구의 수장 또는 고위직 직원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음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이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횡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병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URL: <https://www.kmi.re.kr/>